

社會科學研究方法의 土着化에 관한 小考**

—政治學·國際政治學·行政學分野—

金 光 雄*

<目 次>	
1. 緒 論	3.1 現 況
3. 方法論의 文化非隸屬性	3.2 評 見
3. 現況과 評見	4. 課 題

1. 緒 論

이 글은 方法論에도 「土着化」問題가 제기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 學問의 實質研究가 反土着的이라는 현황파악 이전의 직감을 편견삼아 이 두가지가 相反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社會科學의 어느 分科學問에서나 外國의 理論을 원용해서 說明하지 않은 것이 드물 정도로 學問研究의 태반이 外部依存的인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分科學問은 저마다 「韓國的」인 것을 찾자고 다투어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學問研究를 뒷받침하고 도구역할을 해주는 方法論에 반드시 國境이라는 데 두리를 쳐야 옳으냐는 좀 더 생각해야 답이 나올것 같기도 하다. 즉, 學問의 實質研究는 土着的인 쪽으로 고양해 나아가야 할 것이되, 學問의 研究方法은 굳이 土着的인 方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커다란 과오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研究方法은 文化隸屬的이 아닌 普遍性을 추구하며 또한 이를 屬性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問題는 여기서 머물지를 않는다. 問題는 學問의 實質研究가 外國偏向的인 것의 한原因이 그 方法論에 있기 때문이 아니나라는 데 있다. 이것은 커다란 오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方法論을 接近立場(approach)과 研究方法(research)으로 이해하여 포괄적으로 說明한 경해를 쫓아 이들 세분된 諸構成要素들—原型·理論·模型·假說·法則 등—을 方法論의 總體로 받아들이는 데 이의가 없다면 어떤 立場 어떤 方法을 택해서 理論을 구성하건 模型을 정립하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증거가 되는 理論·模型·假說 등의 내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副教授

** 이글은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와 유네스코 韓國委員會가 1979. 8. 31~9. 2까지 春川에서 共同으로 주최한 表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容이 外國에서 개진 주장된 것을 借用해 왔다는 점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傳統的인 研究方法은 우리의 고유한 研究方法으로 계속 배양해야 하나, 經驗的 内지는 行態主義의 研究方法은 外生的인 影響으로 그냥 심어서는 안되고 잘 接木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더우기 假說의 經驗的檢證 같은 方法도 우리네 고유의 것이 못된다고 하는 그런 立場이 아니라, 이들 모두는 특정 學問研究의 目的에 따라 알맞게 얼마든지 변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立場이나 態度보다는 실제로 이용하는 內容의 適切性이 問題인 것이다. 그러니 形式에 앞선 內容의 問題다. 부언하면, 方法論은 「分析道具로서의 方法」과 「論理展開의 기틀로서의 方法」으로 大別될 수 있다. 전자는 具體的으로 資料를 수집 분석하는 협의의 分野이고, 후자는 原型·理論·概念·假說設定의 기반이 되는 分野이다. 方法論의 土着化問題는 후자에 촛점이 맞추어질 때 논의가 可能해진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지례 主張을 근거로 이 글은 크게 두 部分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하나는 方法論의 文化非隸屬性에 관한 說明을 보충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政治·行政學 分野의 論文을 接近立場別로 選別하여 ① 概念 ② 理論 ③ 假說 ④ 資料蒐集方法 및 ⑤ 假說 檢證 즉 資料分析方法을 통해 現況을 把握해 본 일이다.

글의 範圍를 經驗的 研究를 통해 方法論의 土着化를 해아려보려는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政治學과 行政學 分野의 着作中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한정했고, 그것도 출처를 專門學術誌에 국한했기 때문에 現況把握에는 한계가 있을 줄 믿는다.

2. 方法論의 文化非隸屬性

대처 學問이 發達하기 위하여는 그 學問集團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法則(rule)이 있고, 그래서 共有되는 가치로서의 파라다임이 있고나서 그것이 보충·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學問이 發達한다고 한다. 이것을 넓게 이해해서 法則과 결부된 象徵的一般化(symbolic generalization)의 可能性과 程度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인 問題解決의 양태로서의 범례(exemplar)확인에 따라 正常科學은 科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끔 되었다.(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71, p.181)

이들 복합된 의미의 기본이 되는 것—그것을 파라다임(paradigm)이라해도 좋고, 分科學問의 行列式(disciplinary matrix)이라고 해도 좋은—을 근거로 各 學問은 概念을 정리하고 명백히 하여 理論과 法則을 굳혀가는 작업을 부단히 해온 셈이다. 이를 위해 方法論은 非論理的인 觀念論에서 탈피하여 엄격한 論理展開를 바탕으로 삼아 보다 세련된 수준으로 부상했고, 그리하여 學問의 實質研究의 內容이 보다 나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허나 우리의 학문에는 두 개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말하자면 規範과 實際의 혼돈이 그 하나이고, 學問의 기본가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천명되지 못한 것이 다른 하나이다. 앞의 것은 거론치 않고 뒤의 약점만을 여기서 논한다면 다음과 같다.

學問의 基本價值에 대한 立場은 바로 파라다임의 問題와 통한다. 예거하여, 政治學의 파라다임이 權力이라고 한다면, 無政府狀態를 詠歌하지 않는 한 그것은 東西洋을 긍해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權力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행사하는 方式에 이르러 그것을 民主的으로 해야하느냐 또는 변형된 民主的 方式으로 해도 되느냐는 다분히 文化隸屬的이다. 그 文化隸屬的이어야 하는 부분을 규범과 실제의 구분해 대한 인색때문에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學問發達에 장애요소가 되었음을 부인 못한다. 그런가하면 行政學의 파라다임이 能率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이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현대행정의 方向을 가늠해 볼때, 行政學의 파라다임은 衡平이나 公信力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文化中立의 인言明일 수 있다. 그만큼 方法論의 핵심이 되는 諸要素들은 文化와 歷史에 의해 隸屬받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實際가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특정한 도구 즉 方法을 쓰는 것은 순전히 어떻게 現實 또는 實際(reality)를 인식하느냐와 결정한 理論的 命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그 方法論의 비중과 역할을 헤아려 實質에 관한 것과 달리 汎世界的인 屬性을 인증할만 할 것이다.

따라서 方法論 자체는 ① 理論的 基礎(要素)를 設定하고 ② 이 이론적 기초와 특별히 확인한 논리적 조작을 써서 追加概念을 定義하고 ③ 정의된 개념과 조작을 써서 일련의 公理를 開發하며 ④ 경험적 檢證을 위해 일련의 命題를 이들 공리로부터 演繹하고 ⑤ 受容의 基準과 解釋의 規則을 開發하여 필요한 道具 役割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형식요건으로서의 理論들의 構成要素들이 그 論理展開에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긴 하지만, 거기에 內容 또는 價值가 담겨질 때 土着性 여부가 方法論에서도 問題가 되는 소지가 생긴다. 그것은 權力・衡平・公信力이라는 理解와 價值가 동서양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公理를 개발시켜 이로부터 論理展開를 유도하는 方法論은 演繹的 立場으로 읊다. 그러나 “階級이 높으면 높을수록 求心性이 더 크다”라고 하는 T.K. Hopkins의 公理를 놓고, 다음에 “階級이 높으면 높을수록 遵奉性이 더 크다”는 Hopkins에게는 定理지만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公理가 될 수 있는 처지라면 論理 出發의 立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公理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一連의 法則과 定義가 理論體系에 보태어져 定理를 형성할 때 비로소 빛을 보는 것이니까 公理의 積極적 明白性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定理와 假說로 이어지는 出發의 適實性을 가지고 따져볼 때 狀況要素를 업격히 배제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經驗의 世界(文化隸屬的)와 연결될 때 公理는 이렇게 논란을 자아낼 수 있다.

그래서 方法論에 있어서 形式이 아니라 그 內容에서 “土着化”는 충분히 문제거리가 된다. “土着”이란 “생물이 어떤 곳에 침입하여 거기에 정주(定住)하는 일”(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2, p.2963)이라고 定義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方法論의 土着化 問題를 생물아닌 文化要素가 外部로부터 들어와 定住했느냐 즉 잘 溶解・受容되었느냐

를 따져보는 것이다. 따라서 土着이라는 용어보다는 受容이라는 용어가 生物과 관련되는 土着이라는 용어보다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여하튼 土着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方法論에서 가 아니라 다른 實質研究에서 概念의 受容性이나 分科學問의 範圍를 定할 때 간혹 論議되었다(例: 文承益, “民主主義의 土着化”, 韓國政治學會報, 第8輯, 1974, pp. 34-40; 李宗范“行政學의 土着化에 관한 論據”, 韓國行政學報, 1977, pp. 98-223)

方法論과 결부하여 土着化의 問題를 거론한 論文으로는 黃性模 교수의 “社會科學의 土着化에 對하여”(曹大京 編, 「現代 社會科學 方法論」, 民音社, 1977, pp. 238-248)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社會科學의 土着化란 그 概念부터가 自家撞看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土着化의 문제를 科學의 問題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의 이유는 또 土着化는 主體性의 의미로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權威內在的인 科學을 인증하는 것이 되어 모순에 빠진다는 논리다. 정리해서, 黃教授에 의하면 土着化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外來的인 것을 異質土에 同化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는 自然法的 權利에 대한 誠實性(즉 主體性)을 科學方法論의로 보장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즉 土着化하여 主體性을 키우되 權威的이 될 위험성이 있는 反科學性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科學에 權威가 없어야 한다는 것도 異論의 여지가 많지만 土着化를 主體性의 수준까지 끌어가는 立場은 다분히 우리나라의 社會科學을 그 歷史性에서 照明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受動的인 의미의 土着化에서 積極的인 主體性을 기대한다는 命題가 반드시 實在 言明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요는 「우리의 것」은 못되더라도 「우리의 양식」으로는 되어 우리가 우리 現狀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붙이는 데 무리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外來文化의 受容이요 同化로 항상 거부할 것은 못된다.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論理展開의 기틀(편의상 內容이라고 쓴다)에 관한 論議——그 具體的인 것은 다음의 現況에서 살펴보겠지만——는 土着化의 程度를 놓고 논란을 벌일만한 價值와 必要性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內容이 없는 方法論의 土着性을 거론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거북살스런 느낌을 야기할 수가 없다.

도대체 韓國의 方法論・日本의 方法論・美國의 方法論이라고 하는 式의 國家別 固有의 方法論이 있을 수 있는가. 집의 모양・사용하는 재료는 다르더라도 東洋에서 지붕을 먼저 올리고 꿀조공사를 나중에 하는 그런 기이한 方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現象을 理解하는 方法으로서의 道具는 얼마만큼 精密하고 妥當한 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의 적합성 여부를 헤아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分析道具로서의 方法論에는 土着性의 問題가 전혀 없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거하여, 面接調查方法이 우리나라 方法論에서 資料蒐集에 妥當한가, 實驗方法은 어떠하며 觀察方法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材料와 道具를 놓고 比較해 볼 때 상대적으로 後者가 더 文化隸屬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오해하

지 말아야 할 점은 論理展開의 기틀조차도 理論의 一般化를 추구하는 立場에서는 文化拘束을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隸屬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範圍의 수준이나 메타수준이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3. 現況과 評見

3.1 現　　況

우리나라 政治學・國際政治學 및 行政學 分野의 論文을 되도록 主題・接近立場 그리고 研究方法別 分類를 염두에 두면서 선별해 검토해 본 論文은 12편에 불과하다. 方法論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 본 이 論文들을 分野別로 나누어보면, 政治學이 5편 國際政治學이 3편 行政學이 4편이다. 主題別로 보면 自由主義思想・對外意識・政治文化・北韓・安保・政治的不安定・官僚行態・行政制度改善 및 財政 등으로 다양하며, 接近立場도 크게 나누어 傳統主義와 非傳統主義를 포괄하면서 歷史的接近・社會學的 接近・心理學的 接近으로 나뉜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標準化面接方法에 의한 現地調查가 대부분이지만 우송조사도 곁들이고 事例研究・內容研究를 포함한다. 또한 記述的 研究와 相關關係研究 등의 성격을 띠는 論文이 대부분이며, 因果關係研究를 한 論文은 우연히도 제외되었다. 資料의 分析方法面에서 보면, 事實의 發見 또는 確認을 위해서는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記述的으로 서술한 方法에서 부터 記述統計와 推測統計分析方法을 쓰고 있었으며 일부 論문은 多變數分析의 方法까지 원용하고 있었다.

검토된 論文의 出處는 「韓國政治學會報」, 「國際政治論叢」, 「韓國行政學會報」, 「韓國・在北美政治學者 合同學術大會 論文輯」으로 국한시켰고 한 편의 論文을 「政治學報」에서 선정하였다. 여기서 學術誌 이외에 專門 學術誌가 기관별로 많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훌륭한 經驗研究論文이 많은 줄 믿으나 對象으로 삼지 못했다. 그 代表的인 例가 行政論叢이다.

12편의 論文을 선정하게 된 背景을 약술하면 이러하다. 위에 出處를 밝힌 學會誌에 실린 論文의 총수는 政治學(1971~1978)이 107편 중 經驗研究論文이 30편으로 27.1% 國際政治學(1964~1978: 1966, '67 '73 '74 누락)이 89편 중 經驗研究論文이 22편으로 24.7% 그리고 行政學(1971~1978: 1975 '76 누락)이 67편 중 經驗研究論文이 31.3%를 차지하여, 經驗研究論文만 모두 73편으로 27.7% 정도다. 여기에서 「合同學術大會 論文輯」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經驗研究의 範圍를 第1次 및 第2次 資料를 수집하여 論理展開의 기초로 삼은 것에 국한하였다. 전부 73편이긴 하지만 그중에는 英文原稿・外國에 관한 論文 教育內容評價・動向을 파악한 글・向後의 課題를 제시한 經驗研究가 상당히 있으며,同一한 필자의 論文이 하나 이상 있어서 제외하였으므로, 12편을 對象으로 삼긴했지만 그리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代表性을 여기에서 논하자는 의도는 없다. 멀리는 1964년부

터 최근 1978년에 궁해 발간된 論文을 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실제로는 최근의 것만을 檢討하게 된 것은 經驗研究가 '70년 이후에 와서 活發해졌기 때문이다.

그리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12편의 論文을 통해 理論・概念・假說・操作化・資料蒐集 및 分析別로 方法論의 現況이 어떠하며 어떠한 問題가 있는가를 아래에 대강 記述하기로 한다. 論文 각각에 관하여 言及하기 전에 一般的인 見解를 우선 밝힌다. 극히 한정된 論文을 檢討한 연유때문에 方法論上의 어떤 경향을 把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分科學間에 따라 유독 어떤 方法論의 立場에서 研究한다는 특성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國際關係分科에서는 資料接近의 장애때문에 歷史的 事例研究와 統計資料에 의존한 研究가 많은 평이다. 그리고 明記해야 할 것은, 이 글의 冒頭에서 제시했던 論理展開의 기틀로서의 方法論이 다분히 外國依存의이어서, 方法論의 土着化問題가 論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研究가 준거하고 있는 理論・concept 내지는 分析들이 간혹 전적으로 外國理論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外國理論을 우리사정에 맞게 修正하거나 또는 反命題에서 出發했다. 다만, 사용한 概念을 분명히 하지 않아 바깥 사람들이 인지하는 concept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 같고, 그래서 概念의 操作化過程이 문제시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方法論에서 問題를 삼을 수 있는 것은 論理操作의 過程과 分析道具의 適正性 등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또 分明히 해야 할 것은 비록 外國學者가 내세운 假說을 우리나라 資料로 立證 또는 反證해 보는 研究를 했다고 해서 그 研究가 反土着의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理論의 一般化는 文化風土를 넘어서 完成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3.2 評 見

評見은 다시 部分別로 要約하면서 檢討된 論文을 참고삼아 첨부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謹언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는 비판의 대상이 된 論文들이 결합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단지 評者가 보기에 오해를 사기 쉽거나 미흡한 점을 부각시켰을 따름이다. 論文 한 편으로, 그것도 代表作이 아닐지도 모르는, 論者의 方法論에 관한 理解度를 해아려보는 것은 客觀的이 못된다는 점을 知悉한다. 기실 論文 중에는 불성실한 것이 있긴 하지만 지엽적인 면에 결함이 있는 대로 거의 완벽한 研究가 많다. 다른 하나는 다음에 例示되는 論文들을 問題別로 나누어 놓았지만 이 問題들은 해당 論文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그 이외에도 지적되어야 할 다른 問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論文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方法論上의 의문 때문에 다른 범주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분없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問題는 標本抽出에 관한 說明이 완전치 못하다는 점이다.

方法論에서 問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區分하고 例示하기로 한다.

(1) 外國의 理論과 假說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 까지는 普遍的 法則의 추구를 위해

수긍이 간다해도 論理의 連結이 分明치 않아서 가설의 입증여부가 不確實한 경우가 있다. 한편의 論文을 例示한다.

1) 韓國官僚의 行態를 變態化 行態·過度한 集權化 및 公務의 私利化 등 세 범주로 나누어 概念화해 본 論文은 組織行態 造成의 變數가 人間의 性格과 그가 소속하고 있는 組織機構의 上호작용의 기능이라는 이론을 속에서 韓國人의 性格構造를 分析하고 이를 官僚行態와 연관지어 分析한 研究다. 著은 論文에서, 韓國 行政組織機構나 社會文化制度의 周圍環境에 관한 分析을 제시함이 없이 다만 官僚의 性格을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 研究가 준거하는 이론들은 전적으로 外國學者의 理論에 依存하고 있다. 性格構造를 分析함에 있어서도 客觀的으로 表示한다고 밀는 「心理狀態 調查指標」에 따랐으며 官僚의 行態는 세개의 概念化된 指標에 의해 작성된 質問紙를 가지고 9個部處 公務員 273名으로부터 얻은 應答을 토대로 統計的으로 分析되었다. 이 研究가 검증해 보려는 假說도 外國學者의 假說을 그대로 옮겨 韓國的인 상황에서 確認해 보려하였다. 즉 T.W. Adorno의 權威主義理論에 根據한 가설을 分析의 内容으로 삼았는데 이들을 예거하면; (1) 韓國官僚의 權威的 性格은 대단히 강하다. (2) 權威的 性格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압적인 권력소유 욕망을 가지며 權力에 接近 執着하려한다. (3) 官僚의 性格이 權威의 일수록 자기의 직위와 업무에 만족을 적게 가지며 業務遂行에 피상적이다. (4) 權威의인 性格의 官僚일수록 더욱 더 그의 상사에게 예속하려 하고 業務處理에 있어서 의지하려는 態度를 가지며 상사의 命令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態度를 維持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기의 부하에게는 지나치게 독단적인 態度를 가지려 한다. 따라서 專門家의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態度를 가진다. (5) 權威의 性格의 官僚일수록 公務를 私利化하려는 경향이 높다. 위에 예거한 가설 중에는 가설 자체가 간단 명료해야 한다는 原則을 벗어나 검증하기에도 複雜한 言明이 있다.

權威의 性格의 強度를 測定함에 있어서도 Adorno가 使用한 F-尺度를 사용했으나, 이들 중 韓國人의 價值觀이나 慣習에 비추어 肯定의in 答을 함으로써 強度의 權威性格을 나타낼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質問을 排除”함으로써 測定方法을 韓國의in 사정에 맞추었다.

위의 尺度에 의해 測定된 官僚의 性格과 行態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分析하였다는 說明 없이 論文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첫째, “多數官僚가 強度의 權威性格者로 나타났다. “둘째” “集權化 경향은 지나친 權力所有 欲望으로 生成하는 여러가지 構[具]體的 行態中의 하나인 것 같다.” 세째, “利己的이고 機會主義者들은 自己部下에 대해서는 人間으로서 보다 단순한 業務遂行을 [의] 機械로 보는 傾向이 짙다”. 네째, “無力感에서 기인하는 依賴心은 上部의 지시만 기다리는 行態를 조성하고 상부관청에 業務의 負擔을 가중시킨다”. 다섯째, “自己가 속해 있는 集團을 적극 응호하는 內集團性向은 利己心과 더불어 私利를 추구하게 된다”.

學位論文의 전반과 후반부만을 간추려 낸 듯한 이 論文은, 위에서 제시된 假說과 研究結果의 상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具體的인 方法論에 관한 說明 없이 論理展開조차 산만하여 假說이 檢證된 것인지 또는 反證된 것인지를 가려내기 조차 쉽지 않다. 官僚의 性格과 行態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論證도 문제거니와 좀 더 성의있는 態度의 論文發表가 方法論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假說定立에서 原則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假說을 내세워 이를 검증한 적정한 資料가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資料蒐集의 道具로서의 質問紙構成方式이 초보적이어서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蒐集 分析되지 못한 경우를 包含한다. 論文 두 편을 參考한다.

1) 우리나라 輸出產業의 國際競爭力を 높이기 위하여 支援行政의 간소화를 모색한 論文은 輸出用原資材의 輸入許可 및 事後管理制度와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業務節次에 대해서 集中研究를 한 것으로 業務의 熟知度를 알기 위해 設問調查方法을 일부 원용하고 있다.

理論의 전개는 學術論文이라기 보다 政策論文의 性格上 현행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行政能率의 實效를 거둘 수 있다는 論理的 근거 이전에 한 主張으로 出發하여, 決定的인 言明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問題解決에 임하는 態度는 理論의 전개와 가설의 檢증같은 방식을택하지 않고 狀況分析에 근거를 두고 改善方案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 研究는 記述的 研究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만 事實을 確認하기 위해 貿易業務의 熟知度를 設問을 통해 밝혀낸 점은 일종의 가설을 檢증해 보기 위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설로서의 性格이나 檢證方法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연하면 “——대하여 熟知하는 것은——업무수행을 위하여 必要할 뿐만 아니라——節約을 도모하고, ——費用節減을 기할 수 있는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다.”라는 가설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한 것을 그 內容으로 삼고 있으며 反證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가설형성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把握(검증이 아님)하기 위한 方法으로 設問調查를 했으며, 그 대상자의 數는 26名에 불과하다. 標本에 관해 아무런 根據도 說明도 없어 代表牲을 기대할 수 있기엔 요원하나 경험파악으로 一般化시키려 하지 않는 한 용납될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設問의 方法도 만족스런 것은 못된다. 설문의 尺度를 二分法으로 일관하여 名目的인 것으로 한 것은 어떤 질문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 정도를 밝혀낼 수 있는 評定尺度를 썼어야 옳았다. 같은 內容과 形式의 質問이면서도 어떤 것은 質問을 이중으로(——충분하며 ——이해하는가), 答辯도 복합적으로 만들어(예, 아니오, 충분하나 복잡하며 혼돈을 일으킨다) 質問構成上 지켜야 할 명백성을 결하고 있다. 거기에다 더욱 심한 것은 勤務年限을 나눌 때 級間의 간격이 일정치 못해(1년 미만, 2~3, 6~10, 10년 이상) 그 級間에 나타난 度數는 아무런 비교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한마디로 이 論文은 政策論文으로 輸出支援行政制度의 改善을 위해 정밀한 「흐름의 도식

표」를 도입하고 또한 關稅還給制度를 개선해야 한다는 政策修正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實務에 參考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業務體系를 綜合的으로 管理運營하기에 充分히 效果的인 면밀한 分析을 못하고 있으며 方法論上의 嚴格性에서 벗어나 있다. 아마도 이러한 論文을 “韓國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뜻은 主張을 앞세우고 정밀한 증거의 뒷받침 없이 論理를 전개하는 것이다, 外國의 理論에 전혀 준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규정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方法論의 土着化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主張의 논리를 개진하는 것이 土着의 길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의 方法이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2) 지난 백 년간 韓國인이 國際情勢와 外交를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깊이있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論文은 현상의 一般化에 대한 욕심 없이 事實發見으로 일관한 歷史性에 관한 記述的 研究의 標本이다.

굳이 明示的인 假說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開化期 이후 韓國人の 對外認識이 상당히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다는 通念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筆者는 하고 있다. 즉 一般假說을 反證함으로써 새로운 假說을 파악해 보려는 歷史的 研究인 것이다.

論文은 閔泳煥의 千一策을 풀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韓國最初의 外交官이라고 할 수 있는 閔泳煥에게서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勢力均衡 概念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고, 事大外交의 正當性을 파악할 수 있으며(清), 外交의 理想主義的 要因(義理)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1894년 清·日戰爭 이후 清이 敗亡함으로써 清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은 물론 지나치게 黥倒하는 지경에 이름으로써, 주변 列強의 勢力均衡 變化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態度는 內政干涉을 경계하면서도 日本에게 호의적인 反應을 보이고, 한편 干涉의 보상을 俄國에 依存함으로써 치유해 보려는 政策轉換을 把握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무렵 韓國人の 주된 對外 관심사는 露·日關係와 韓國問題로 인한 露·日談判過程에 집중되었다. 당초의 露에 대한 好意의인 態度는 自由의 利權伸張에 치우친 露의 態度를 경계하기에 이르렀고 이전 外勢를 믿을 수 없다는 態度變化가 1898년에 와서 두드러진다. 그러면서도 영토적 야심보다는 통상권 신장에 목적이 있는 英·美와의 交流가 露國의 侵略을 경계할 수 있다는 勢力均衡의 外交認識을 갖고 있었다.

한편 日本支配期의 國際情勢에 관한 認識은 外勢의 도움으로 抗日戰爭에서 승리하여 獨立을 쟁취하는데 다분히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世界列強의 帝國主義政策을 십분 이해하고 있기에 充分한 認識이었다. 그러면서도 몇가지 國際情勢의 상황과 변화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獨立의 可能性을 믿고, 신문의 논설과 강화회의에 보낸 호소문 등에서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 希望의 序頭는 1919年 美國上院에 제출된 韓國態勢報告書에서 비롯되어 美國에 거는 기대가 점차 부풀기도 했다.

그 후 東洋平和와 韓國 獨立維持의 불가분성에 관한 여러 韓國人の 의지가 신문의 사설

에서 韓龍雲氏의 朝鮮獨立의 書에서 強力히 표방되었으며, 이것은 海外의 호응을 얻었고 결국 日本敗亡에 대한 確信을 굳게 하였다.

論文의 結論은 첫째, 개항 이래 韓國人の 對外認識이 開化되어 있어서 近代的 國際政治意識基準에서 보아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기에, 적어도 對外認識의 결함이 亡國의 原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韩國人の 對外認識이 理想主義的 傾向을 띠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外交方向을 現實性 있게 把握한 점으로 보아 지극히 現實主義의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對外路線은 韩國이 주변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政派가 제안할 수 있는 여러 政策代案 중의 하나라는 것으로 外交政策의 伸縮性을 암시한 것 같다.

당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몇 사람의 의견에다 주로 獨立新聞·大韓每日申報·新韓民報의 사설에서 근거자료를 모아 韩國人の 對外認識이 흔름을 分析한 이 論文은 歷史的接近方法으로 記述的인 서술형태를 띠고 있다. 事實發見을 위해 事件을 基準으로 나눌 수 있는 時代別로 認識變化의 추이를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論文은 가설을 설정한다거나 검증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대로 훌륭한 연구다.

하나 論文에서 필자는 왜 “韓國人の 對外知識은 극히 限定되어 있었고 무지몽매한 狀態에 있었다”고 가설아닌 가설을 세우고, 주로 新聞의 사설을 근거자료로하여 反證하였는지 모르겠다. 그 反證으로 설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反證에 필요한 충분한 論據로서 신문의 사설·저명인의 연설·정부의 외교문서는 “韓國人の 對外認識”을 대변하기에 다분히 局地의이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韓國人”은 一般大衆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大衆은 몽매하였으나 政府와 여론형성자 등 知識人의 對外觀은 時代思潮에 민감했다.”라고 言明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亡國의 原因으로 韩國人の 對外認識의 결함”까지 論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歷史的接近立場의 方法上 理論形成·假說定立·資料를 통한 그 檢證등은 非歷史的인 接近立場의 方式과 달리 얼마든지 독자적인 가설검증 방식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적합하고 풍부한 經驗的資料로 가능하다.

(3) 概念이 분명하지 않거나 분명해도 概念區分·下位概念 또는 指標를 선정하는 操作化作業이 미흡하여, 資料蒐集 및 그 分析結果가 당초의 論理를 뒷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도 質問構成上의 問題가 포함된다. 네 편의 論文을 例로 들었다.

1) 大學에 있어서의 經費支出이 어떠한 要因에 의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分析함으로써, 大學運營의 效率化를 위한 指針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한 論文은 72個 四年制大學을 대상으로 우송 조사에서 얻은 資料를 根據로 하고 있다.

論文의 理論들은 大學의 經常單位教育費가 管理的變因·教育的變因 그리고 歸屬的變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假定을 根據로 했으며 각 變因을 적절한 指標를 찾아 計量化 시켰다. 즉, 管理的 變因은 學生數 理工系의 比率·學科當 學生數·校費 中 人件費의 比重 및

事務職員當學生數 등을, 教育的 變因은 教員當學生數·教員 充足率·時間講師 對專任教員의 比率·講座當學生數·施設 確保率·學生當獎學金 및 實習費 比重 등을, 그리고 歸屬的 變因은 所在地·設立者 및 體制 등을 指標로 삼고 있다.

各 指標 등이 正 또는 負의 方향으로 從屬變數를 解釋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諸作業假說을 검증하기 위해 單純相關關係와 重多回歸分析方法을 원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바는 大學의 類型別 回歸函數들이 비교적 높은 決定係數를 보이고 있다는 것, 設立者·人件費·學生數등이 重要한 說明要因이 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私立綜合大學에 대한 定員擴大와 地方單科大學에 대한 財政支援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정책전의의 일부로 밝히고 있다.

外國學者의 理論을 根據로 出發한 이 論文은 우선 調查對象으로서의 大學類型(設立者)에 있어서 國立大學의 數가 15個에 불과 한데 多變數分析을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점은 筆者도 지적하고 있으며 國立大學의 全係數가 15個校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所在別로 서울과 지방 그리고 體制別로 綜合大學과 單科大學의 경우에 標本 自體의 異質性이 크다는 점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問題는 指標를 선정한 操作化 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다. 管理的 要因을 代表하고 있는 指標와 教育的 要因을 代表하고 있는 指標와 教育的 要因을 代表하고 있는 指標間에는 상당히 유사한 性格의 것이 있다. 즉 教員充足率·施設確保率·實習費 比重 등이 教育的 變因에 포함되어 있는 정당성은 校費中 人件費의 比重이 管理的 變因으로 인정되고 있는 論理와 矛盾된다. 그리면서도 연구의 한 해석은, “——國立大學의 경우—— 등 教育與件과 관련된 變因 등이 포함된 반면 私立大學의 경우는 事務職員·施設·實習費 등 보다 管理의 인 要因들이 單位教育費 水準을 說明하는데 貢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당초의 概念區分을 무시하고 있다. 적절한 指標選定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혼동을 자아내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論文은 性格上 相關關係 研究에다 比較研究를 겸한 것이라고 구분해 놓을 수 있겠다.

2) 自由主義的 改革思想에 관해 研究한 어느 論文은 먼저 自由主義運動을 넓게 해석하고 自由主義運動의 유형을 구분해 보기 위해 두가지 基礎概念을 썼다. 하나는 自由主義運動을 주도한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運動의 전개과정에서 동원되는 수단이다. 주도계층을 둘로 나누어 엘리트와 대중으로, 그리고 동원수단을 둘로 나누어 평화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으로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이들 각기의 결합으로 自由主義運動을 네 개의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제 1유형으로 啓蒙的 自由主義運動, 제 2유형으로 請願的 自由主義運動, 제 3유형으로 變革的 自由主義運動 그리고 제 4유형으로 反抗的 自由主義運動 등이다. 어느 경우에서나 自由主義運動은 그 전개과정에서 주로 제 1유형을 시발점으로 하며, 그 뒤에 2, 3, 4의 유형이 뒤따르나, 대표적인 운동유형으로는 제 1과 2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自由主義運動에 관한 論者의 개념틀이다.

衡平社運動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 韓國 自由主義運動의 전개과정을 1870년 부터 1945년 말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시대배경에 따르는 특색을 보여주고, 따라서 運動의一般的特徵으로 ① 運動의 未分化性 ② 思想的 對決性 ③ 體系性의 缺如 ④ 特殊性의 支配를 들고 있다.

思想의 혼동기에 발생했던 衡平社運動은, 당시의 運動이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의 갈등을 전제로하여 대중과 유리된 특수계층·특수신분의 활동에 불과하고 대중의 無理念·無組織·無活動의 性格에 침잠된 상태와는 달리, 一般大衆의 자발적 생활의 의지가 짐약된 行動이 있다는 점에서, 歷史上 특기할만한 自由主義運動의 한 유형이다. 白丁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가치를 내걸고 인간적 예우·교육의 기회·경제활동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선 이運動은 “時勢의 진운에 적절한 바”라는 社會的呼應을 얻게되고 전국적으로 그組織과活動規模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運動에 참여한 사람들의 身分上의 差異와 地域間의 對立으로 内部의 葛藤이 점고된다. 여기에 反衡平運動이 전개되고 급기야 근 10년간의 運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소멸하기에 이른다.

衡平運動의 性格을 社會主義運動·民族陣營·日本 水平運動과의 關係의 側面에서 分析하고 있지만, 衡平社는 ①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대중적인 자발성에 의해 나타난 自由主義 社會改革運動이고 ② 非暴力的 組織運動이며 ③ 社會主義나 民族主義 등 다른 思想體系와는 직접적으로 無關하고 ④ 초보적인 自由主義的 改革運動에 국한되어 전국규모로 확대되는普遍性을 띠지 못했다.

論者는 마지막으로 韓國 自由主義改革運動이 志向해야 할 바를 衡平社라는 하나의 事例를 빌미로 주장하고 있지만 歷史的인 事實에다 하나의 事例만을 가지고 傾向分析은 물론 指針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의 課題를 類推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論文이 준거한다고 하기에는 論理가 계속되지 않는 冒頭의 自由主義運動의 모형만 하더라도, 일단 제시한 이상 여타의 유형에 해당되는 事例를 찾아 대비해 보는 것도 모형제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일 것이며, 비교를 통해 보다 깊은 事實分析이 가능할 것이다. 經驗的 資料의 不足이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歷史 事例研究의 명백한 한계일 것이다. 모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自由主義運動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도계층”과 “동원수단의 下位概念을 도출하는 논거가 미약하고, 이것은 결국 衡平社運動이 제 2의 유형이라는 과장적 성격을 유형화시켜 주는 이상의 說明力を 갖지 못한다.

歷史的研究가 그러한 것처럼 經驗的 資料를 더우기 政治分野에서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제2의 資料와 이 論文의 경우 당시의 新聞 등을 통해 事實反證의 근거로 삼게된다. 이처럼 歷史的 事實을 分析하는 立場에서는 그 서술방식이 다분히 記述의 일 수 밖에 없고 資料蒐集도 관련되는 자료의 출처를 찾아 밝혀낼 수 밖에 없다. 다른 歷史的研究는 假說을 把

握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論文은 단순히 事實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쳤다. 따라서 客觀的인 部分資料를 根據로 主觀的인 解釋을 붙여 自身의 主張을 펴 나가는 傳統的 接近立場을 취한 논문이다.

3) 한 研究의 結果에 대한 科學性을 굳이 내세우지 않으면서 事實의 發見과 問題의 提起에 충실한 한 論文은 서울市의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이들의 政治性向을 調査한 글이다.

政治變化 내지는 政治發展을 가늠해 보기 위해 政治文化와 그 一部로서의 政治性向에 대한 分析이 必要하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 研究는, 清溪川과 永登浦의 無許可 住民을 集落抽出하고 그 가운데에서 7個洞을 任意抽出한 다음, 12,778家口 中 3.29%에 해당하는 420家口를 등현간격으로 標出했다.

標準化面接方法에 의해 家口主・配偶者・또는 20才 이상 成年家族을 대상으로 조사한 内容은 社會・經濟的 背景에 관한 資料 이외에 政治性向을 밝힐 수 있는 네 가지 指標인 政治的 關心과 知識・政治的 커뮤니케이션・政治的 觀點과 規模 및 政治的 能力과 參與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政治性向이란 概念을 構成하고 있는 下位概念은 이들 네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은 이 研究의 概念들을 構成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諸要素에 관한 現況을 밝힌 이외에, 이 研究는 또한 “不利한 法制定에 대한 反應으로 대신되는 政治能力을 종속변수로 하고, 教育・組織參與・經濟失調・社會的 關心・社會的 態度 및 政治的 認知 등을 獨立變數로 하여, 이들간의 관계도 밝히고 있다.

論文은, 위의 네 下位概念이 어찌하여 政治性向을 說明하고 있는지 아무런 論據를 제시하지는 않으나, 一般的으로 國內外 政治學者들이 흔히 依存하고 있는 要素들을 援用한 것이다. 그러므로 無知・無學하고 經濟的으로 궁핍한 低所得 大衆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概念的 構成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증좌가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下位concept을 조작해서 質問紙를 構成함에 있어서 被調查者가 충분히 터득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調査後 프로빙方法에 의해 신빙성이 없는 답은 모두 제외시키는 여과과정을 거쳐야 한다. 教育程度가 낮은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調査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研究가 밝힌 몇 가지 흥미있는 事實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的 關心과 知識 面에서 「公共的」事件에 관하여 높은 認知度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政治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行政的 系統體系를 통한 情報傳達이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사실과, 情報의 流通은 官에서 民으로 즉 民에서 始源되는 정보의 流通이 극히 受動的이라는 사실과, 실상 이들 情報의 流通은 行政的인 것일 뿐 國家를 단위로 하는 公共的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다. 세째, 政治的 觀點과 規範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住民들은 비교적 회망적인 未來觀과 「資本主義倫理的」規範을 지니고 있으며 強力한 反體制的 要素를 결하고

있다. 네째, 政治參與는 市民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방 潛在的 政治能力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利益保護에는 積極的이다. 다섯째, 學歷・社會的情報에 대한 關心度・政治的 認知 등과 政治的 能力과는 有意味한 關係가 있는 반면에, 經濟的 失調水準・近代性에 대한 態度・組織參與度 등과 政治的 能力과는 無意味한 關係이다.

위와 같은 事實의 發見과 關係의 分析은 度數分布와 分割表分析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특히 有意性은 Chi-square 檢證과 Cramer's V에 의해서 밝혀졌다.

어떤 事實의 發見은 또 다른 問題를 提起한다. “市民意識은 낮은데 政治知識은 높고, 政治能力은 높은데 政治參與度는 아주 낮은 “都市 低所得層의 政治性向을 어떻게 說明하고 處方하여야 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이러한 發見은 다분히 韓國의in 現狀에서 가능하다. 假說을 檢證하여 要因을 밝히는 研究와 事實을 發見하여 問題를 提起하는 研究間에는 學問研究나 問題解決을 위한 政策提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때, 研究는 內的論理를 추구하는 입장이든 事實을 確認하는 臨床的 입장이든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복잡한 計量分析을 행하는 학자들의 반성으로, 記述統計學의 方法을 원용하여 政治과 行政現象을 충분히 析分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고해 가는 이 때, 事實發見 위주의 研究態度는 基礎知識의 發見을 위해 유용한 입장인지도 모른다. 다만 이 研究가 方法論의in 慎意에서 批判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不利한 法制定에 대한 反應만으로 政治能力을 測定한 概念의 操作化問題와 교육정도가 낮은 階層을 대상으로 質問紙를 사용한 面接調查를 행했다는 점이다. 교육정도가 높건 낮건 面接調查方法은 우리나라와 같은 文化風土에서 극히 제한된 의견을 캐낼 수 있을 뿐이며 자칫 信賴度가 낮은 資料를 蒐集할 可能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論者도 “社會科學的 調查方法論에 대한 過度한 믿음을 갖지 않은 態度로 研究에 임함으로써, 間接的으로, 원용한 方法의 限界를 인증하고 있다.

4) 家意識이 現代 韓國官僚行態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研究한 論文은, 한국의 “家族”이라는 의미규정을 미국의 그것과 대비해 다르다는 說明으로 시작한 점에서, 다분히 韓國의in 事實과 知識을 캐보려는 인상을 주는 글이다. 더우기, 官僚制란 普遍的인 현상이면서도 韓國의 官僚制를 研究하기 위해 官僚文化에 영향을 주는 傳統文化(굳이 傳統文化인지 모르겠다)와 關聯시켜 病理現象을 살펴보는 입장이어서, 實質的인 問題가 韓國의in 입장에서 투시되고 있다.

官僚行態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要因들, 그 가운데에서 특히 文化的 特性을 영향요인으로 상정하고, 의식과 사상 중에서도 家意識 또는 家族至上主義로 압축시켰다. 이 글의 理論的 틀을 筆者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면, 家意識이 權威主義와 割據主義 내지는 義理意識을 낳았고 이것이 官僚制의 逆機能 또는 順機能으로 나타난다는 論理이다.

이를 檢證하기 위해, 우선 家族主義와 權威主義・家族制度와 割據主義・家族主義와 義理意識의 關係를 일부는 意見조사의 方法으로 다른 일부는 관찰 또는 청문의 方法으로 밝혀

보았다. 그런데, 韓國人이 家族主義의이라는 事實을 權力 또는 階級志向의면서 對人關係에서 主와 從의 上下關係가 분명한 것으로 이는 家父長의 權威가 正當하고 당연한 의식에서 연유한다』라고 하는 論理까지는 일종 수긍이 간다해도, 「家族 中에 뒀어론이 한 분 계셔야 한다」는 질문・「父母의 意見에 反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질문・또는 「子女가 結婚을 하면 집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父母의 責任」이라는 질문 등을 통해서 權威主義를 확인하기에는 그 操作的 過程이 너무나 局地의이다. 資料自體는 1962년에 蒐集된 것과 1977년에 蒉集된 것을 혼용하고 있고, 標本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한편, 割據主義에 관해서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집안과 집밖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業務處理에 있어서 競爭과 秘密主義 위주의 行態를 자아냈다는 논지로, 客觀의 資料라기 보다는 간헐적인 他人經驗을 자료에 대신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義理意識은, 평상의 예절을擴大解釋한 감이 없지 않으나, 信義의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되어 報恩意識과도 통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概念에 관한 理解가 어찌되었든 義理를 說明하는 實例를 日本資料로 원용했다는 점이 비록 參考資料의 性格을 띠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그 內容도 義理와 責任을 혼동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父母가 위독할 때 “故鄉에 간다”는 孝道에 대비되어, “重要한 會議에 參席한다”는 의무를 義理의 操作的 概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모순이다.

한편 좀더 설명된 家族主義의 功過에서 인용된 資料는 慶尙南道와 全羅北道 公務員의 上級者 退勤時間과 관련된 下級者の 退勤態度에 관한 것이다. 上司에 맞추는 訴근태도를 義理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論理의 비약이다. 資料分析이 주는 內容도 극히 빈약하다. 義理를 가늠하자면, 오히려, “전에 신세진 일이 있는 同僚가 正當하지 못한 行政行爲를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어 밝혀야正確할 것이다.

韓國의 官僚行態를 설명하기 위해 “윗사람을 섬기는” 한국의 家族關係를 주요한 決定要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論文은, 家族이라는 單位와 國家라는 單位의 사이에 관한 언급없이 의식과 행위의 흐름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각 要素의 概念化가 분명치 않다. 經驗의 資料를 일부 設問에 의해서 구했으면서도 論理의 展開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假定的 言明을 檢證없이 肯定的 言明으로 인지하고 있다. 되풀이하거나와, 理論의 在에서나 主張을 뒷받침하는 資料의 適合性 및 分析結果가 안일한대로 현상의 극히 한 部分만을 확인해 주는 정도이다.

좀더 엄격히 볼 수 있다면 父母의 의견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態度(權威主義)로 學歷別・年齡別로 區分해 놓고 있는데, 이런 資料를 活用하기 위해서라도, 官僚의 行態를 行爲의 類型 및 性格別로 구분하고 權威 割據 義理에 관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行態와 연결시켜보는 研究가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4) 分析方法이 完全하지 않거나 전혀 세련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비교되는 標本의 크

기가 均衡을 잃었거나, 面接方法으로 資料를 菲集하는 것이 과연 妥當한가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도 여기서 함께 問題가 된다. 論文 두 편이 그 보기이다.

1) 動員된 投票者를 중심으로 政治參與의 현상을 분석한 한 論文을 보면：政治參與의 一般學說로 教育程度・生活水準・大衆媒體에 대한 노출・政治的 知識水準 등이 投票參與率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믿고 있으나, 이 論文에서는 韓國의 都市有權者들이 農村有權者에 비해 낮은 投票參與率을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그 이유를 政治에 무관심한 “動員된 投票行態”에서 찾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 論文은 外國理論을 그대로 受容한 것이 아니라 反命題에서 출발한다.

資料蒐集을 위한 方法은 都市化의 水準・產業化的 정도・選舉時 競爭의 程度・地域의 分布 輸送 通信 中心地에의 地理的 近接度를 감안하여, 73個 선거구에서 12個 선거구를 多段層化方式으로 無作為로 抽出하여, 그 對象地域의 成人市民 2,276名을 面接調查한 것이다.

投票에 動員되는 市民의 背景과 性向을 분석하기 위해 論文은 첫째, 市民의 政治參與 類型을 다섯 가지 즉 投票・政治的 討論・選舉運動・組織活動 및 公務員과의 接觸으로 나누고 要因分析을 통해 投票參與가 다른 類型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는 동시에 政治的 知識・關心・能力 그리고 個人的 近代性등과의 相關係數로 미루어 볼 때 다른 參與 類型과 달리 낮은 相關係數를 表示함으로써 “多數의 動員된 投票者가 存在한다”는 강한 시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로는, 動員된 投票者의 政治的 志向을 알아내기 위해 投票 때 영향을 주는 사람・입후보자에 대한 認識度・자신의 政治能力 評價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動員性에 관한 確認을 했다.

세째로, 動員된 投票者의 投票行態는 社會의 地位와 關聯이 있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性別・年齡・居住地・教育程度・職業 및 階層地位로 나누어 동원되지 않은 投票者와 비교한 결과, 男子보다는 女子가 동원대상이되고 또한 나이가 높고 교육정도가 낮고 “위광”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階層地位가 낮을수록 投票에 동원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밝혀 냈다. 이는 “近代化的 影響”이 아직 스며들지 못한 社會의 한 斷層이라고 해석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投票性向은 社會의 特質 이전에 個人的 近代性水準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前提下에, 宗教・大衆媒體・社會變動・教育・家族計劃・合理性・自己中心的 偏狹性 등 개인의 신념과 가치와 태도를 13尺度(Smith와 Inkeles의 尺度를 수정한 것임)에 따라 측정하여 社會의 特質과 相關係係를 찾아본 결과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동원된 投票의 傾向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論文의 네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동원된 投票者의 政治的 定向은 民主的 價値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 등이라는 점을 野黨에 대한 支持度를 통해 간접적으로 밝혀냈다. 결국 論文이 밝힌 것은, 投票參與率만 가지고는 한 나라 市民의 政治意識水準 또는 民主主義水準을 알아낼 수 없으며, 이를

좀더 밝히기 위하여는 동원된 投票者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後進的 政治參與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理論을 확인해 준 점이다. 民主的 政治參與를 고양하는 길은 동원된 投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個人的 近代化水準, 즉 社會의 가장 傳統的인 部分을 불식시키는 것이 첨경이 될 것이다.

이 論文은 論理展開에 있어서 段階的으로 적절한 分析方法을 곁들여가며 事實發見에 正確性을 기하고 있다. 概念의 正確性과 원용된 方法의 嚴格性이 論理展開의 雷을 높여주고 있다. 資料蒐集方法에서는 面接調查를 分析方法에서는 分割表分析과 相關關係分析을 주로 하고 要因分析을 일부 사용했다. 分割表分析에서 x^2 檢證을 한 것은 다른 論文이 有意性 檢證을 간과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다만 評者로서 의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첫째, 政治參與의 類型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한 要因分析의 해석상의 문제이다. 완전한 要因分析表를 제시하지 않아서 한 要因에 荷重되는 變數의 다른 要因에 대한 荷重을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코뮤날리티(h^2)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各變數의 各要因에 따른 分散比率을 몰라 전체의 비중을 알 길이 없다. 둘째, 동원된 투표자와 동원되지 않은 투표자를 비교하는 分割分析에서 후자의 事例數가 전자의 그것에 비해 10倍를 능가하고 있어 비교 표본이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x^2 로 유의성이 모두 검증되기는 했으나 동원된 投票者에 관한 연구라면 事例數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세째, 특히 野黨에 대한 질문문항에서 동원된 投票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다섯개의 설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이다. 이는 方法論上 심각한 問題를 제기한다. 질문에 대한 內容을 理解하거나 질문에 대한 自身의 意見을 표시할 정도까지로는 정치적 사회화가 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질문지를 갖고 하는 標準化面接方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하는 例라고 하겠다. 이런 경우 非標準化面接方式을 開發하든가 아니면 당장 이 分析에서는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有意性檢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2) 지난 30년 동안 人口의 構成內容이나 社會・經濟的側面에서 엄청난 變化를 겪은 韓國社會의 近代化 過程에서의 農村의 變化에 시각을 맞춘 어느 論文은, 農村의 政治變化를 분석하기 위해 農村部落 네 곳을 선정한 比較・事例研究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論者는 기존 外國學者가 주장하는 政治文化의 保守的 傾向에도 불구하고 政治文化는 維持・變化된다는 前提下에 그 變因으로 세 가지를 들어 理論틀을 構成하고 있다. 즉(1) 政治的 條件 (2) 社會・經濟的條件 및 (3) 既存 政治文化의 權威가 그것이다. 이들 變因을 韓國의in 狀況에서 說明하면서 이 論文은 몇 가지 變化推移를 세분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보면, 첫째, 지난 30年間 韓國의 政治에는 參與를 조장하는 制度가 도입되었다. 둘째, 韓國의 社會・經濟的 條件의 變化에서 教育化・都市化・通信媒體의 普及・所得水準의 向上 등이 政治的 知識과 意識에 變化를 주어 政治文化의 變化를 초래했다. 세째, 政治文化의 傳

統的인 既存權威가 獨立과 더불어 完全히 상실됐다. 줄여보면, 韓國의 政治文化는 餘他의 與件變化와 傳統的 權威의 상실로 많은 變化를 초래하였으며, 그 內容은 能動的・批判的・參與的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를 立證하기 위해, 論文은 京畿・江原・忠清南北道에 있는 4個郡의 4個里를 大都市와의 거리 및 교통편의도와 눈에 보이는 部落의 所得水準에 따라 선정하고, 여기서 20歲 이상의 住民 가운데서 398名을 無作爲抽出하여 調查했다.

우선, 네 마을의 近代化 程度를 알기 위해 11個의 指標(原文에는 尺度라고 되어있음)를 사용하였다는데, 이는 韓國農村의 사정을 감안하여 選擇된 指標이다.

論文은 이어서 參與의 程度를 알기 위해 4個의 變數 (1) 國家次元의 市民的 知識 (2) 地域次元의 市民的 知識 (3) 市民的 意見化 (4) 市民的 自信感 등을 사용하여 “態度的 性向”을 측정하였다. 즉 政治知識은 意見化와 自信感을 가지게 되고 이들은 政治參與를 조장한다는 圖式을 염두에 둔 것이다. 4個의 變數는 8個의 指標에 따라 測定되었는데, 이를 指標에 따라 단순 度數比率만이 分割表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近代的 指標와 함께 分析된 네 마을의 比較는 指標別 단순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마을이 어느 마을보다近代化되고 參與의이라는 結論을 내고 있다.

分析틀을 構成해 간에 있어서 論理의이었던 이 研究는 分析段階에 이르러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우선 “近代化가 政治文化를 參與의인 것으로 만드는 데 寄與한다”는 結論을 유도하기 위해 행한 分析方法은 4個의 마을을 指標別 순위대로 나누어 놓은 것에 根據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예컨대 近代화와 參與間의 相關關係나 因果分析 없이 이런 結論을 도출한 논거를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 다음은, 參與를 測定 分析한 경우만 하더라도 네 마을 간의 차이가 단순 度數比率만으로 比較하여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面接된 사람들은 각 마을 인구의 10% 내지 40%이며 20歲 이상을 따지면 그 比率은 물론 높아질 것이다. 이들 母集團에서 추출된 標本集團의 性格은 母集團 전체의 성격을 해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有意한가의 정도를 밝히는 分析까지 해야 이 마을의 參與度가 저 마을의 參與度보다 차이가 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어느 한 時點의 狀態를 調查한 것만으로 마을은 急速한近代化를 겪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도 論理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近代化 또는 參與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研究는 比較基準이 될 수 있는 과거의 狀態도 調查해야 하는 時差分析으로 可能하며,近代化가 參與를 조장했다는 研究는 앞서 지적한 대로 다른 分析方法을 使用해야 할 것이다. 分析의 틀과 分析方法이 유리되고 동시에 원래의 의도(假說)를 밝히지도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5) 分析方法이 嚴格하고 洗練되어 있으나 測定自體에 問題가 있거나, 測定으로 實제현상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經驗的 知識이 왜곡되거나, 또는 한정된 變數로 現狀을 客觀化시키기에 무리가 있는例가 있다. 세 편의 論文을 보기로 들었다.

北韓政府의 政策關心이 7년동안 어떻게 变遷하였는가를 新聞社說의 内容을 分析함으로써
추적한 論文은 北韓의 政策이 地域과 主題에 따라 그 強調點이 時間의으로 어떻게 變化해
왔는가를 규명한 研究이다.

相對的 偏差指數라는 모델을 理論的 根據로 해서 主題의 強度를 상대적으로 比較함으로
써 客觀化시킨 이 研究는 事實確認을 세련된 計量的 技法에 의해 이루었다는 점에서 推測
統計學의 技法이 活用되는 경우와 그 性格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서, 假說의 檢證이나 現
象의豫測을 目的으로 하지 않더라도 質的 内容을 分析하기 위해 量的 技法을 원용할 수 있
는 可能性을 極大화시켜 준 標本이다.

내容分析을 위해 선정한 變數는 크게 地域別 關心・革命基地路線・人民解放戰線支援・國
際社會主義團結 및 統一問題 등 다섯개의 下位概念을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三大革命力量
增强政策을 기초로 선정한 것으로, 이에따라 도합 43個의 變數를 택했다. 이들 變數는 7年
間의 社說 約 2000個 중에서 無作爲抽出方法과 有意抽出方法을 혼용하여 抽出된 140個 社
說을 대상으로 當該 主題의 有無에 따라 1 또는 0으로 量化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基礎資料
行列式을 만들고 다시 年度別로 각 變數의 數值를 합해서 年度別 原資料 行列式을 作成하
였다.

따라서, 各主題別 分析은 相對的 偏差指數를 사용하여 年度別로 圖表化시켰다. 分析에
있어서 한 가지 명기해야 할 것은, 이 偏差指數는 觀測值과 期待值의 차이를 가지고 強調
度를 測定하게 되는데, 偏差를 自乘하지 않았기 때문에 主題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0.00,
기대 이상일 때는 正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위로 변하는 指數로 分析된 主題別 内容
을 몇가지 간추리면, 첫째, 北韓의 對外工作戰略이 197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둘째 北韓의
對外戰略의 主攻地城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이 되었다. 세째, 北韓對內事業에서는 革命決意
의 재천명에서 부터 金日成 主體思想의 強調등 6個 增設事業의 年度別 變化推移를 알 수
있다. 네째, 南半部 民主革命支援의 内容을 비난과 선동으로 나누어 非民主的 獨裁 또는
人民蜂起등으로 分析하였다. 다섯째, 第三世界에 대한 혁명유대 형성전략은 反帝등을 표방
하면서 단결호소로 나타났으며, 1070년을 정점으로 기복을 보인다. 여섯째, 一般的으로 北
韓의 政策關心은 國內의 經濟와 政治問題・對第三世界 友好增進 및 對內關係의 順으로 强
調되었으며 이들 중 몇가지가 指數分析으로 그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分析內容은, 극히 간추려진 것에 불과하다. 이 論文은, 한마디로, 한 현상의 變化
推移를 세분하여 數字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일방 변화의 기점에 대하여 당시의 背景을
보충설명함으로써 완벽을 기하고 있다. 量的分析에 質的解釋이 충분히 가미되어 統計分析
이 안고 있는 限界를 극복하려고 努力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計量的分析方法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함을 이 研究論文도 완전
히 블식하지는 못하였다. 非傳統的 研究立場이 지니는 몇몇 결점은 科學的 研究를 표방하

는 學問立場에서 強調한 “科學性” 속에 희석되어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知識의 發見에 貢獻할지 모르나, 方法論의 결합이 자칫 은폐되어 진정한 知의 探究가 誤導될 위험에 놓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北韓의 政策意圖를 알기 위해 굳이 相對的 偏差指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깊이있게 파고듦으로써 보다 深度있는 分析이 可能할 수 있다는 傳統論者의 意見을 評者가 반드시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研究接近立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할 뿐이다. 다만 이 研究는 우선 “어떤 主題도 더 強調되도록 組織의 影響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前投”가 반드시 옳은 前投인가, 해당 主題가 있다 혹은 없다로 名目的 測定만 함으로써 지극히 단순화시킨 것을 根據로 相對的이나마 強度를 比較하는 그 強度는 진정 의미있는 것인가, 表示된 顯在的 內容만을 分析함으로써 政策意圖의 眞意를 把握하기에 그 類推는 分明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表示된 內容은 글의 行間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理解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끝으로 地域別 關心과 主題間의 關係도 더 깊이 分析해야 할 必要是 없지 않았던가 하는 점등에서 더 욕심내보는 評見이 있을 수 있다고 보태고 싶다. 다른 견해가 이처럼 얼마든지 있다해도 統計的 分析의 원용방법과 그 연마를 위해 위의 方法은 계속 開發되어야 할 방법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2) 東亞細亞體制의 構造와 機能의 變遷이 韓半島의 安定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體系의 인知識을 歷史的인 레이타의 分析을 통하여” 파악한 論文은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가 東亞細亞 強大國體制와 그 勢力構造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는 歷史的 推移를 통찰하면서 構造機能主義의 立場에 서고 있다.

1000년에 걸친 歷史的 資料를 分析했다는 점에서 歷史的 研究의 범주에 해당되며, 特定 變數간의 關係를 分析했다는 점에서 相關關係研究도 된다. 이러한 性格을 지닌 이 論文은 歷史的體制를 20個의 下部體制로 區分하고, 이를 下部體制를 說明하는 13個의 體制變數 즉 (1) 極의 數 (2) 堅執性 (3) 國家의 數 (4) 震動展 (5) 強大國의 數 (6) 同盟關係 (7) 戰爭의 數 (8) 戰爭期間 (9) 強大國間 戰爭 (10) 強大國——弱少國戰爭 (11) 體制內戰爭 (12) 戰爭死者數 및 (13) 人口比戰爭死者 등과 韓半島의 安定과 관련되는 6個의 變數 즉 (1) 國境衝突 (2) 內亂 (3) 戰爭期間 (4) 戰爭規模 (5) 主體性 및 (6) 統一性 등을 相關關係分析과 要因分析技法에 의해 연결시켜 본 研究이다.

論文은 唯一體制가, 兩極體制가, 아니면 多極體制가 體制安定의 이냐에 관한 여러 學者の 主張을 根據로 理論을 構成하여, 地域의으로나 機能의으로 韓半島가 東亞細亞體制의 한 下部體制임을 수긍하고, 이의 構造와 機能의 變化가 韓半島의 安定에 직결된다는 命題를 전제로 하고 있다.

分析을 위해 선정한 多數로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理論과 假說을 근거로 資料의 蒐集可能성도 고려하였다. 동시에 分析의 價值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分散度를 가진 多數를 선정

하였다. 資料의 出處는 王儀·蒙古元興王氏 高麗 及 日本的關係 등을 비롯하여 英文資料인 統計便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밖에도 이 論文은 東亞細亞의 範圍와 領域을 정함에 있어서나, 歷史的 下部體制를 20個로 區分함에 있어서나, 論理的 嚴格性에 충실하다. 또한 體制變數間의 關係를 밝히고 이를 安定度와 연결시킴에 있어서도 統計分析上의 處理가 치밀하다. 나아가, 19個 全體 變數를 體制의 構造的 類型을 알기 위해 要因分析을 함으로써, 6個의 要因 즉 戰爭·極性·震動·侵略·戰禍 및 堅執 등을 밝혀낸 것도 計量分析의 論理와 技法에 대한 확실한 理解로 가능하다. 이들 分析에 의해 各變數는 “흥미있는 經驗的 知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多極的 性格의 東亞細亞體制가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결과한 否定的인 作用을 한 반면에, 韓半島의 體制內의 重要性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肯定的 作用을 한다는 점이다.

이 研究를 통해 얻은 結論 중에는 多極體制가 安定을 보장한다든가, 國家間의 同盟關係가 體制內의 戰爭과 關係가 있다든가 하는 기존 外國學者들의 理論을 否認하는 發見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體制의 堅執性이 강할 때 強大國은 弱少國에 대해 體制內外에서 戰爭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發見도 있다.

理論構成에서, 概念의 操作化에서, 假說의 定立에서, 資料의 菲集과 그 分析에서 嚴格하고 철저한 이런 論文이 제기하는 方法論上的 問題는 일견 아무것도 없는듯이 보인다. 분명히 다른 接近立場에 의한 論理展開와는 明示性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行態主義的 接近立場이 觀念論의 모호함을 벗겨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接近立場 내지는 원용한 方法論은 또 다른 問題를 提起한다. 그것은 論者도 수긍하듯이 認識論上の 問題이며, 計量化의 限界에 따른 과행적 知識의 전달경향이다. 分析한 變數들을 다시 살펴보면, “國家의 數”가 “同盟關係”와 “戰爭의 數와 높은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變數는 동시에 韓半島의 主體性과 正의 그리고 統一性과 負의 높은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極의 數”라는 變數와 비교해 볼 때, 이 “國家의 數”가 보다 큰 說明力を 갖는 根據를 論理的으로 說明하기에 相關關係分析이라는 技法은 너무나 異상적인 知識만을 제공할 뿐이다. 體制의 構造로 認識되는 國家나 強大國의 數와 體制의 機能으로理解되는 同盟關係나 國家間의 戰爭 등을 연결시키고 거기에다 韓半島의 戰爭規模와 연결시키는 것은 體制論을 過信하는 論理이다. 또한 10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무수히 접철된 事件의 歷史的 意味를 時代性을 극하여 文字化시킨 것은 歷史的 研究가 지닐 수 있는 현상에 대한 集中分析에 대한 역행이 아닐 수 없다. 600년이 지난 후에 韩半島에서 일어나는 戰爭과 그 이전의 體制 범주 내에서의 戰爭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歷史性을 水質의 변함도 없이 10세기 동안 흐르는 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지나친 單純化다. 모름지기 複雜의 금언대로 셈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명심하면서, 計量化에 빗댄 지나친 논리비약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政治暴力의 形態와 程度의 차이를 說明하는 데 있어서 그 要因의 하나로 經濟成長의 效果를 드는데, 理論的 立場에서 두 變數의 關係는 線型的인 것과 非線型의인 것으로 나누어 주장되나, 이를 한데 둑어 假說을 定立・立證한 研究가 있다.

두 理論의 차이는 經濟發展 도상에서 政治暴力이 正 또는 負의 關係를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변하느냐, 아니면 특히 工業化 속도에 따라 暴力도 일정한 정점에 이른 후 감소되느냐에 따라 区別된다. 前者가 線型理論이며, 後者가 非線型理論으로 외국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리고 각者에 따라 약간 상이한 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이들을 한 예 모아 여섯개의 假說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 經濟發展의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政治暴力의 정도는 낮아진다($Y=a-bx+e$). 둘째, 經濟發展이 잘 된 나라일수록 政治暴力의 정도도 따라서 높아진다. ($Y=a+bx+e$). 세째, 經濟發展이 最低段階에서 점점 높아질수록 政治暴力의 정도도 높아진다. 그러나 일단 高度產業化段階로 들어간 나라일수록 政治暴力은 다시 하강하는 傾向을 보이게 된다. ($Y=a+b_1x-b_2(x)^2+e$) 네째, 經濟開發水準이 높아지면 政治暴力은 감소한다. 그러나 開發水準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影響이 政治暴力의 감소효과로 나타나는 정도는 낮아 진다($Y=a-b\log x+e$). 다섯째, 經濟開發은 어느 한도까지는 政治暴力을 감소하는 影響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限度를 지나면 成長의 效果는 오히려 政治暴力을 증가시키는 方向으로 작용한다($Y=a-b_1x+b_2(x)^2+e$). 여섯째, 經濟發展은 政治暴力과 하등의 直接의인 關係를 갖지 않는다.

두 개의 基本概念 중, 經濟development은 「에너지」消費의 人口單位當量으로 指標化 되었고, 政治暴力은 政治的 不安定이라는 概念下에 一元的으로 取扱되어 오던 反抗・內亂・強制・抑壓 등을 獨립된 현상으로 區分하여 18개의 指標를 찾아내고 이를 要因分析하여 5개의 要因 즉 反抗型 暴力・內亂型 暴力・挑發型 抑壓・制裁型 暴力 및 強制資源組織 등으로 測定하였다. 이들은 다시 複合指標로 바뀌었고, 이를 從屬變數로 삼아 81개를 分析單位로 하여有意度 0.05의 水準에서 檢證되었다.

檢證方法은 각 模型에 따라 回歸分析에 의했다. 分析結果를 정리 소개하면, 첫째, 反抗型 政治暴力과 挑發型 抑壓은 經濟development의 水準으로 說明되지 않는다. 둘째, 內亂型 政治暴力은 經濟development을 初期와 中期에보다 높은 段階의 水準에 이를 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째, 經濟development이 진전된 나라일수록 制裁型 暴力은 감소하되 그 감소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發見은 政治的 不安定이라고 불리는 暴力의 諸類型이 각기 相異한 形態로 經濟development과 相關關係를 맺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經濟development과 전혀 무관한 類型도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傳統的 發展理論이 수정되어야 할 可能성을 비치고 있다.

다른 類似한 研究에 대한 批判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度數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論理的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다른 의미있는 度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關係를 규명하는 研究는 虛偽相關關係를 놓고 計量的으로는 합당시되는 結論을 유도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研究에 있어서 度數의 機能을 전도시켜 政治的 不安定이 經濟發展에 끼치는 영향을 보았어도 유사한 係數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傾向의 研究에 있어서 論理的 正當性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이 研究가 상대적으로 충실히 못한 것으로는, 政治暴力은 要因分析의 技法까지 동원하여 要因을 찾고 複合指數를 사용했으면서, 經濟發展은—그것이 비록 많은 研究가 선행되어 代表指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그와같이 操作化作業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資料의 경우에도 그 수집시점이 반드시一致하지 않았을 可能性이 있다. 끝으로 “土着化”의 問題를 課題로 부각시키는 경우에, 지엽적이긴 하지만 英文圖表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 課題

이상에서 검토해 본 몇 편의 論文만 가지고는, 政治學・國際政治學・行政學 분야의 經驗的研究方法論에서 이른바 「土着化」의 과제와 결부시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현재의 方法論의 수준으로 미루어 앞으로 韓國의 實質研究를 格上시키기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글이 처음부터 方法論의 土着化 자체에 反意를 갖고 시작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土着化의 문제는 適性과 水準의 문제를 합축한다. 이 글은 適性보다는 水準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記述된 것이 사실이다.

水準의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각論文은 知的研究를 위해 그 論理展開에 필요한 方法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군데군데 결함이 있긴 하지만, 소기의 研究目的을 달성하고 있다. 이 글이 처음부터 「分析의 道具로서의 方法論」보다는 「論理展開의 기틀로서의 方法論」이 보다 더 土着性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見解를 취했던 것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見解가 상대적으로 옳다면, 方法論의 土着化를 문제 삼을 때는 論理展開의 기틀 쪽, 즉, 理論・模型・概念・假說・操作的 行爲 쪽에 보다 더 分析의 초점을 맞추었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評者 자신의 各己 多樣한 主題에 관한 식견도 부족하려니와, 또 한국에서는 立證되기 어려운 假說을 外國理論에서 도출하여 연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分析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테면, 어느 연구에서 그 假說을 立證하면 원래의 理論은 보편성을 더하게 되고 반면에 反證하면 韓國에서는 說明力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 유용한 연구로서 의연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다. 반복하거니와, 더욱기 國家間의 比較研究를 하는 文化橫斷的인 研究에 있어서 基礎概念과 理論이 韓國의 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견 否定的인 立場보다는, 기왕이면 假說도 예하여 “참여적인 리더쉽보다는 권위적 리더쉽이 조직의 성과를 높일 것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論理展開의 출발부터 內生的이라는 評을 들을 것이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의사를 고수하고 싶지

는 않다.

또 큰 윤곽으로 말하자면, 接近立場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사정에 더 맞고 어울린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接近立場은 研究者의 價值觀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主題와 구할 수 있는 資料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어떤 史實을 事例삼아 記述하거나, 또는 時代別로 나타나는 동일성격의 史實을 한 데 모아 縱斷的으로 時系列分析方法에 의해 어떤 규칙성을 밝혔다고 해서, 어느 쪽의 立場 즉 傳統的인 立場이 더 좋다거나 또는 非傳統的인 立場이 더 맞다거나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단지 後者가 觀念論을 탈피하는 잇점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實體의 심층에 이르는 정도까지 비껴 저울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검토해 본 바와 같이, 分析方法面에서도 그 수준이 여러 층으로 나뉘긴 하지만 研究目的에 따라 적합한 方法을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操作的 定義와 그 作業에서 안일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기에 근사한 分析方法이 실제로 假說을 檢證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책을 범하기 일쑤이다. 分析方法의 洗練性 여부 자체는 그리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오히려 技法이 세련될수록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變量으로 一般化의 模型이 정립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상이다.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技法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限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좋다.

資料의 菲集方法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質問의 內容을 이해 못하거나 面接에 응해 의견과 태도를 개진하는 것이 익숙치 못한 집단을 대상으로 標準化面接과 같은 方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方法論의 土着性에서 얘깃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資料의 信賴度를 높일 수 있는 여과과정을 거쳐 편집된 資料만을 分析하는 지혜와 다른 方法을 보완해서 병용하는 것으로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實驗研究와 觀察研究를 한 論文이 이 分野에는 없어서 論議가 못되었지만, 教育學과 心理學 같은 다른 分科學問에서 이 方法에 대한 評價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자격을 갖추고 경험을 쌓은 調查者가 있다면 投票行態와 같은 研究는 觀察調查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組織內의 라더쉽 연구는 實驗調查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글의 主題인 土着化問題를 매듭지어야겠다. 韓昇助 교수의 글을 몇 줄 引用하기로 한다. (『韓國政治研究의 傾向과 評價』, 「韓國政治學會報」, 1978, 173-185중 176) :

“어떤 學者들은 西歐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가 韓國政治現實에 不適合한 것처럼 美國政治學의 理論이나 方法論도 韓國政治를 研究하는데 不適合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適合한 政治理論과 方法論이 創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西歐學者들의 理論도 그것이普遍的인 妥當性을 주장하려면 先進國만이 아니라 韓國政治現實을 適切하게 說明할 수가 있어야 한다. 同時에 經驗的 調查研究에서도 美國에서 배워 온 것을 韓國政治研究에 곧바

로 適用할 수는 없으며, 現地實情에 가장 有用하고 適切한 方法이 考察되어야만 한다.”

다시금 方法論의 土着化를 강조하는 한 見解이나, 이 引用文을 바로 이해했다면 하나의 보순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떤 理念과 制度의 不適合性을 方法論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는 價值의 문제로, 方法論 자체도 價值觀에서 始源을 찾는다는 命題를 잊고 있는듯 하다. 원래 理論을 借用해 보고 移植해 보려는 것은 中範圍 정도밖에 안되는 理論을 메타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學者의 욕심과 노력 때문이며 더불어 方法論도 따라오게 마련인데 이러한 人間의 텁구의욕을 소침하게 만들 이유를 찾기 힘들다

우리것을 만들고 갖겠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집착으로 보긴 하지만,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만족하는 한국인도 가야금의 선율에 도취하는 미국인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道具는 文化의 장벽을 넘나드는 오피한 힘을 갖고 있다. 더 큰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당장의 연구에서 概念을 명료하게 定立 分類하는 일과 測定을 위요한 操作化 作業의 연찬이 이 나라의 「土着的」 學問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다.